

반값 등록금과 고등교육환경의 변화

조선일보 기자
곽수근

지난 8월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대학의 정원감축계획을 연계한 그동안의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학구조개혁의 방식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학령(學齡) 인구 감소에 따른 미달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의 큰 틀은 유지하되, 그 방법은 바꾸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황 장관이 말한 ‘기존의 방식’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자율적인 정원감축계획을 낸 대학에 가산점을 주는 것을 말한다. 올해 교육부는 대학 특성화사업을 비롯해 각종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2015~2017학년도 정원을 201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해 10% 이상 줄이면 5점, 7% 이상~10% 미만은 4점, 4% 이상은 3점의 가산점을 줬다.

명목 등록금 인하 추진 논란

올해 대학 특성화사업에 선정된 대학 가운데 상당수는 정원의 4~10%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정원을 줄이지 않기로 한 서울의 일부 대학들은 재정지원사업에 탈락했다. 이런 가운데 신임 교육부 장관이 밝힌 구조개혁 방식의 전환은, 정원감축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인 대학의 부담을 덜어준 셈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부총장은 “입학정원을 줄여 재정지원을 따는 방안과 정원감축을 하지 않는 안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다 후자를 택했는데 잘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원을 4% 이상 줄인 다수의 대학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취임 직후 반값 등록금에 대한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8월 황 장관이 2016년 이후에는 대학의 명목 등록금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 형태로 학생들에게 예산을 지원해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에서 더 나아가 등록금 자체를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 현행 ‘반값 등록금’ 제도는 대학 등록금의 절반을 국가장학금과 대학 자체 장학금 등으로 지원하는 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가장학금 제도를 2012년(1조 7,500억 원)에 도입한 정부는 2013년 2조 9,000억 원, 올해 3조 7,000억 원으로 재원을 늘려 왔으며, 내년에 4조 원으로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4조 원으로 늘린 국가장학금 재원에 대학의 장학금 등 3조 원을 더해 총 7조 원의 반값 등록금 재원을 마련해 등록금 총액 14조 원의 학생 부담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이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기에 ‘맞춤형 반값 등록금’ 제도로 불리고 있다. 황 장관이 말한 명목 등록금 인하는 고지서에 찍히는 등록금 자체를 낮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에게 등록금 인하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2011년 5월 한나라당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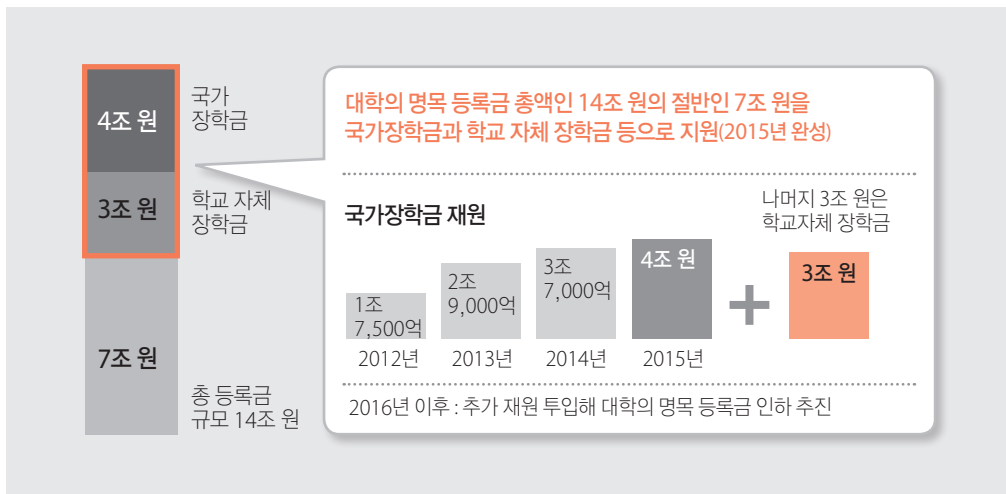


그림 1 | 정부의 ‘반값 등록금’ 구상

내대표 시절에 대학 등록금을 반값 또는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반값 등록금 도입에 큰 역할을 했던 장관이 이 제도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임기 내에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반값 등록금에 대해 “학생 부담이 줄어들긴 했지만 대학 등록금 자체(명목 등록금)가 반으로 줄어든 것은 아니므로 ‘반값 등록금’이 아니다”고 비판해온 야당 등의 요구가 다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국가 예산을 추가로 들여 대학의 명목 등록금을 낮추는 것은 국가 차원뿐 아니라 대학 입장에서도 최선은 아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부메랑이 된 반값 등록금

명목 등록금 인하를 추진한다는 구상에 대학이 긴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동안의 반값 등록금 제도가 대학의 경쟁력을 끌어내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려면 전국 대학생의 등록금 총액 14조 원 가운데 절반을 정부 예산과 학교 안팎의 장학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델 국가장학금 예산(7조 원)을 제하고도 각 대학이 등록금을 낮추거나 교내외 장학금을 확대해 3조 원을 마련해야만 ‘반값 등록금’이 가능해지는 구조인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각종 국책 사업 대상을 뽑을 때 해당 대학이 등록금을 낮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평가하면서 각 대학에 일제히 등록금 인하 또는 동결을 요구했다. 이처럼 대통령 공약 사항인 ‘반값 등록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그동안 재정의 60~70%를 등록금 수입으로 충당해온 대학들이 정작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예컨대 수도권 4년제 대학은 당분간 실험, 실습 장비 구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오래된 건물 개보수 계획도 무기한 연기했다. 물가는 해마다 오르는데 등록금은 낮춰야 해 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학교 관계자는 “이공계 학과가 실험 기자재 개선을 요청하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관련 기자재를 사는 게 좋겠다’고 전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의 한 대학은 첨단 기술 연구센터를 위한 거액의 건축비를 마련하고도 반값 등록금 재원 조달이 부담돼 센터 착공을 미루기도 했다. 학교 측은 “벌써 몇 년째 등록금 수입이 동결되고, 장학금 수효는 늘어나는데 어떻게 연구개발(R&D) 센터를 지을 여력이 있겠느냐”며 “거액이 필요한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는 거의 포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전국 150여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실습비, 기자재 구입비, 도서 구입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해마다 학생 1인당 교육 투자가 줄어드는 추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1년 37만 1,000원에 달했던 학생 1인당 기자재 구입비는 2012년엔 33만 3,000원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도 16만 7,000원에서 16만 1,000원으로 내려갔다.

특집 | 국가의 고등교육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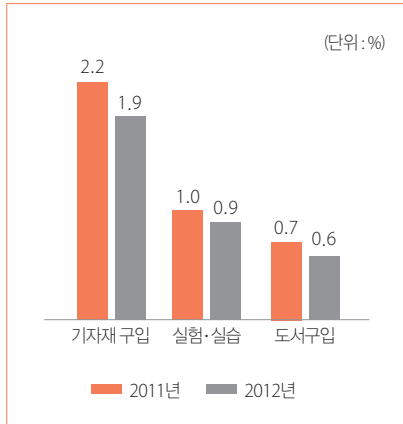


그림 2 |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 감소한 실험·실습비 등 지출비율(사립대지출총액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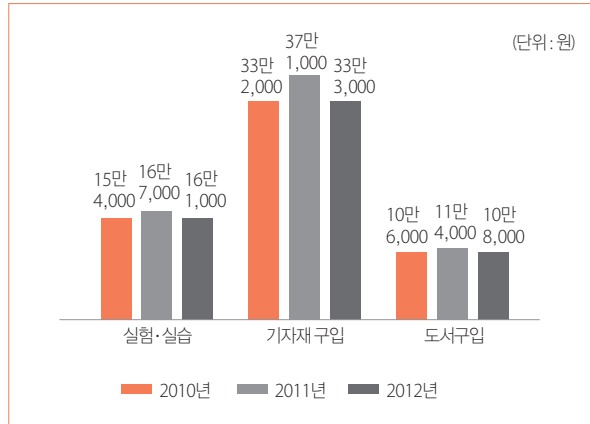


그림 3 | 반값등록금 시행 전후 사립대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 등 변화

‘교육의 질’ 떨어질 우려

일부 대학에선 반값 등록금의 여파가 학생들 수업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시간강사를 해고하고, 강의를 통합하면서 학생들 불편도 커진 것이다. 예컨대 경남의 4년제 대학은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에 따라 등록금 액수를 전년도보다 5% 인하였다. 이에 따라 등록금 수입이 40억 원 줄어들어 학교 운영에 다소 어려움을 겪게 됐다. 학교 재정의 절반을 등록금 수입에 의존해오던 다른 대학은 운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강사들을 해고하고, 그 강의들을 전임교수에게 다 넘겼다.

서울의 한 대학은 강사 2명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까지 40명씩 3개 반으로 운영하던 사회학 관련 교양과목을 120명 정원의 1개 반 강의로 바꿨다. 이 학교 학생은 “활발한 토론 수업으로 진행된다고 선배가 추천해서 수강 신청을 했는데 수강생 120명의 대형 강의로 바뀌어 토론은 사라지고 강의식 수업으로 바뀌어 실망했다”고 말했다.

올해 예·체능학과 통폐합에 대한 논란이 이어진 것도 대학이 운영난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 1학기 서울의 한 음대는 학교 측으로부터 내년 신입생 정원을 올해의 3분의 1로 줄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주로 일대일로 수업이 진행되는 음대 특성상 운영비가 많이 드니 정원을 줄여 다른 단과대로 편입하라”는 요구였다. 이 대학에서 교수가 1대1로 작곡을 가르치던 수업은 1대6으로 바뀌어 예전 같은 도제(徒弟)식 배움이 불가능해졌다. 학교 측은 재정 압박이 심해 1대1 수업을 그룹식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지방의 한 대학이 예체능 계열 학과를 보건의로 계열로 바꾸려 한 것도 비슷한 이유 때문이었다. 경남의 한 불문학과 교수는 “이대로 가면 문학·사학·철학 등 기초 인문학도 고사(枯死)될 위협에 놓이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재정의 70% 안팎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일부 사립대학은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을 비롯해 각종 도서구입 비용을 줄이고 교수의 출장비를 깎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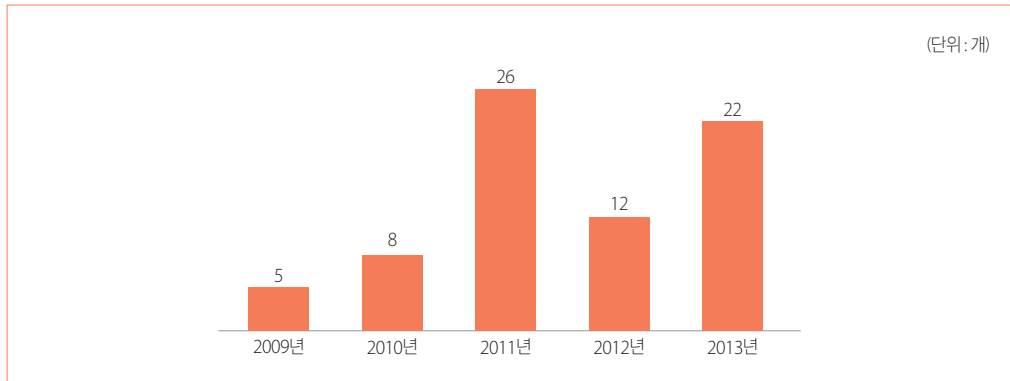


그림 4 | 통폐합된 학과수

등록금 의존 줄일 ‘제도 개혁’ 필요

한편에서는 대학이 그동안 축적한 이월금의 일부를 풀면 반값 등록금 때문에 재정이 힘들어지는 일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월·적립금은 쓰다 남은 자금과 특정사업 등을 위해 적립하는 기금 등을 뜻하며 등록금 수입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올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995년에 2조 7,188억 원이던 사립대의 이월·적립금이 2012년 10조 5,513억 원으로 4배쯤 늘었다”며 “각 대학이 많게는 수천억원씩 가지고 있는 이월·적립금을 활용하면 등록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다수 대학은 “이월금을 쌓아둔 대학은 재정적 여유가 있는 일부 사립대인데, 이런 예가 다수의 대학에 적용되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한 입학처장은 “세계의 유명 대학 상당수는 꽤 많은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며 “대학이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데 써야 할 적립금을 당장 등록금을 낮추는 데 쓰자는 주장은 눈 앞만 바라보는 근시안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낮추는 데 매달릴 것이 아니라 대학의 등록금 의존 정도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때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국내의 4년제 사립대의 한 해 수입 가운데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57%(2012년 기준)에 이른다. 이처럼 대학이 등록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선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금 혜택 확대, 대학의 영리 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 필요

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의 한 대학 총장은 “고등교육의 질은 등록금 등 재정의 안정성에서 비롯되는데 지금처럼 등록금을 내리라고 강요하면 대학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른바 ‘반값 등록금’ 제도가 올해로 시행 6년째를 맞이했다. 학생 부담을 크게 덜어주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대학의 교육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시동을 건 대학 구조개혁은 가뜩이나 위축된 대학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림자를 드리우기도 했다. 정원 감축으로 대표되는 ‘대학구조개혁’과 대학 재정의 핵심인 ‘등록금 규제’는 대학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정부가 명분만을 앞세우며 무차별적으로 대학구조조정을 하거나 등록금 인하를 강요한다면, 우리 대학의 미래는 시들어가는 꽃처럼 활력을 잃을 수 있다.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과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조율을 할 필요가 있고, 대학은 나름대로 체질 혁신을 꾀해 고등교육의 질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 ‘등록금이 아까운 대학’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반값 등록금’으로 누구나 대학 가는 사회와, ‘등록금이 걸맞는’ 최고 수준의 고등교육이 가능한 사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도 바뀔 수 있다. 양립할 수 없는 선택지라면 시행착오보다는 결단이 더 필요한 때다.

필자소개

곽수근 | 조선일보 기자

서울대를 졸업하고 카이스트(KAIST)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창의공학연구원에서 창의성 아카데미 고위자 과정을 수료했다. 공군본부 시험출제관을 지냈고 조선일보 기자로 사회부, 기획취재부, 사회정책부 등을 거쳤다. 2009년 조선 왕실 의궤반환을 위한 서울시 시민위원, 2012~2013년 중국 광저우에서 연수 특파원으로 활동했다. 『창의사고 수학』, 『우리 역사와 함께 하는 과학 이야기』 등의 책을 썼고, 『창의퀴즈 100』, 『이미지로 생각해요』 등의 책을 기획출간했다. 주요 관심분야는 교육, 과학기술, 중국, 어린이 등이다.